

암반규제 개혁법안 각의결정

- 일본정부는 규제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업, 노동, 특구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각의결정하고 국회에 제출, 통과할 경우 성장전략의 성공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

□ 암반규제를 폭파시키기 위한 개정법안

- 일본정부는 ‘15.4월의 각료회의에서 아베노믹스를 추진을 뒷받침해 줄 중요 3법의 개정안을 결정
 - 주요 내용은 ①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개혁 등을 추진하는 「농협법 개정안」, ②고용규제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「노동기준법 개정안」, ③국가전략특구에서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시킨 「특구법 개정안」 등임

< 3법 개정안 개요 >

법안	포인트	목적
농협법 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JA전 중의 지역농협지도권 폐지 ○ 농협의 경영목적을 농가의 소득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⇒ 지역농협에 자율성 부여 ⇒ 해외 농산물과 경쟁력 향상
노동기준법 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소득 전문직에 「탈시간금」 도입 ○ 탄력근무시간제(flex time)를 보다 유연하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⇒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⇒ 육아·간병과 양립 촉진
특구법 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작은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 채용 가능 ○ 도시공원에 보육시설 건설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⇒ 의사 부족문제 해소 ⇒ 부족한 보육시설 확보

- 아베 총리는 이번 국회를 「개혁 단행 국회」라고 부르면서 규제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
 -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성공 열쇠인 「암반규제」를 폭파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장전략 추진을 가속시킬 방침

Ⅰ 농협법(농업위원회법, 농지법 등) 개정안

- 현실에 맞지 않고 쌀 중심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농업 체제를 개혁하여 젊은 영농인과 기업에 의한 대규모 농업을 촉진시키려는 의도

- 농협법 개정안에는 지역농협을 총괄해 온 JA전중(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)의 감사·지도권 폐지도 포함
 - 일본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농협 개혁은 6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베 총리도 「패전 이후 최대 개혁」이라고 강조, 지역농협의 자율경영과 독립성을 높여 강한 농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조치
 - 일본 전국에 있는 700여개 지역농협의 경영 목적을 「영농인의 소득 증대」로 설정하고, JA전중은 ‘19.9월말까지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
- 지역농협의 임원은 장래성이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한 영농인이나 우수 농산물 판매인*으로 과반수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
 - * 쌀이나 야채 판매기업, 가공기업의 경영자 등으로 농가가 아니어도 됨
 - 겸업농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는 관행을 고쳐 농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농협을 운영하도록 개선
 - 지역농협의 기능 중에서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문은 주식회사나 생협(생활협동조합)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, 농협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
- 농가의 선거를 통해 선출했던 농업위원회 위원을 지자체 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
 - * 현재 선거를 통한 선출 방식이 관행화되어 위원 선출에 대한 투명성이 낮음
- 농지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영농생산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의 한도를 25%에서 50% 미만까지 상향
 - 영농생산법인에 대한 자본 투자를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영농법인의 사업 확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

< 농업의 성장 산업화를 위한 주요 법안 개정안 >

법안	포인트	목적
농협법 개정안	- JA전중의 감사·지도권 폐지	- 지역농협의 자율성 확보 및 창의·연구력 향상
농업위원회법 개정안	- 농업위원 공선제를 폐지, 지자체 장이 임명토록 변경	- 투명성 확보 및 외부인재 등용이 용이
농지법 개정안	- 농업생산법인의 임원 수 규정을 완화	- 판매에서·가공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화를 지원

- 일본정부가 농업 개혁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TPP 협상이 타결되면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하기 때문
- 사임을 표명한 JA전중의 반자이 회장은 아베 총리에게 “농협 개혁에 협력하는 대신, TPP 협상에서 쌀이나 보리 등 중요 5품목을 보호해 줄 것을” 요구

② 노동기준법 개정안

- 노동기준법 개정안은 일하는 시간이 아닌 성과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「脱시간급(연장근무수당제), (white collar exemption)」 제도를 신설, 이르면 2016.4월부터 시행 예정
- 금융 딜러, 시장분석,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연봉 1,075만엔 이상의 전문직이 대상,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거나, 시차 때문에 밤에 국제전화로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
- 대상자는 노동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의 규제(하루 8시간, 1주일 40시간)에서 제외되어 시간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에, 심야근무이나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이 없어지게 됨
- 대신에 ①연간 104일의 휴가, ②업무 종료시간과 시작시간 사이에 일정한 휴식, ③ 회사 체재시간 등을 제한하는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채택
-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,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업무로 인한 과로사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
-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추가 수당이 나오지 않는 「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」도 확대 실시
- 근무한 시간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시간만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, 일하는 시간을 직원이 유연하게 정할 수 있음
- 탄력근무시간제의 확대는 직종에 제한 없이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음
- 예를 들어 바쁜 달은 하루 10시간 씩 근무하고, 다음 달은 하루 6시간 근무하는 등 3개월 단위로 노동 스케줄을 결정하여 일하는 방식
- 기업들은 종업원의 유급휴가 실시를 의무화, 종업원들이 연간 5일은 반드시 사용하도록 경영자가 지시해야 함

- 현재는 직원들이 휴가를 신청하는 시스템이라서 유급휴가 취득률은 50% 미만, 기업이 톱다운(top-down) 방식으로 직원의 휴가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
- 중소기업에게는 월 6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에 대해 50% 증액된 임금의 지불을 의무화시켜 기업들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을 촉구토록 함

< 근로 방식 변경 내용 >

제 도	脫시간급(신설)	재량근로제(확대)	탄력근무시간제(확대)
포인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과에 대해 임금 지불 - 주 2일 휴일 조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동시간은 사전에 정해서 관리 - 디자이너 등 약 60만 명에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퇴근 시간을 조정 - 3개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봉 1,075만엔 이상의 딜러, 분석가, 금융상품개발, 컨설턴트, 연구직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금조달지원 은행원 - 기간시스템 영업직 - 품질관리업무 등 추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육아·간병 중인 사람 등
시간외 근무 수당	X	X	○
심야 휴일 수당	X	○	○

- 민주당은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「시간외 근무수당 제로 법안」이라고 비판, 심의과정에서 폐기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베 정권과 논쟁이 예상됨
- 민주당은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여당이 제출한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2번이나 폐기시킨 전력이 있어,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

③ 특구법 개정안

- ‘14년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된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에 규제완화 항목을 추가,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년 가을부터 시행 예정
- 기업들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 등 완화 정책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검토해야 함
- 외국인 의사들도 진료를 희망할 경우 지방의 작은 진료소에서도 연수 목적으로 일할 수 있는 「임상수련제도」를 확충
- 현행 외국인 의사 채용은 의료설비나 인재가 갖추어진 대형 병원으로 제한되어 지방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

- 또한 외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진흥을 위해 대형 병원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단독 진료소에서도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
- 도시의 심각한 보육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놀이기구나 스포츠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
- 도시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므로 공원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
- 공립학교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「공설민영학교」의 인정,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약 3년간 근무할 수 있는 「지역한정 보육사」 자격의 신설, 가사도우미로 기업이 고용한 외국인의 체류 허가 인정, 창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원스톱센터 설치, NPO법인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도 포함

□ 시사점

-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강하게 백업할 규제개혁 3법 개정안은 농업, 노동관련 개혁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
- 규제개혁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으로 투자로 연결되면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
- 저출산·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
- 유연한 근무시간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육아나 가족의 간병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
- 한국도 암반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존 해소, 기업 특례인증제도 등을 담은 특구법이나, 노동개혁, 농업개혁에 대해 규제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주목하여 참고할 필요

(참고자료)

닛케이신문(2015.4.3./10), 마아니치신문(2015.4.3), 아사히신문(2015.4.4), 산케이신문(2015.1.5. 4.3/10)